

공 개



의안번호	제 177 호
의 결 연 월 일	2020. 5. 27. (제 10 차)

의
결
사
항

DGB대구은행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5. 27.

1. 의결주문

DGB대구은행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DGB대구은행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DGB대구은행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류를 통하여 심사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한 결과, 서비스의 혁신성,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등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DGB대구은행에 대해 지정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 참조

나. 제4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필(2020.5.26.)

(별지)

DGB대구은행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DGB대구은행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다 음 —

1. 상 호 : DGB대구은행

2.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범위

- 비대면 실명확인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증표에 부착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을 대조

3.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대상

- (이용자 범위) 금융소비자
- (업무대상) 비대면 계좌개설

4.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

- (실명확인증표 촬영) 고객이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촬영 후 제출하면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위·변조 여부 확인
- (고객 얼굴과 대조·검증) 고객이 본인의 얼굴을 촬영 후 제출하면, 사전에 제출한 실명확인증표에 부착된 사진과 특징점 등을 대조·검증

5. 규제특례 대상 금융관련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6. 부가조건

- (실명확인증표)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사진의 위·변조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으로 실명확인증표를 제한하고,
 -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사진의 위·변조 여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안면인식기술을 적용할 것
- (실명확인 대상) 혁신금융서비스를 이용하여 비대면 실명확인을 진행할 수 있는 고객을 '개인'으로 한정
- (증빙자료 보관) 실명확인 증빙자료(인증시점 및 고객이 촬영한 사진 포함)의 보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서비스 지정 후 2개월 후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것
- (소비자 보호방안) 소비자 보호방안(분쟁해결방안, 배상방안 등), 서비스 범위, 소비자피해 발생시 책임 소재 및 업무분장 등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서비스 지정 후 2개월 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방안의 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받은 후에 서비스를 실시할 것
- (보안성 검토) 혁신금융서비스 실시 전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

7. 지정일 : 2020. 5. 27.

8.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별첨)

관 계 법 규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하 "관련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 대상에 관한 사항
3.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에 관한 사항
4. 자료제출, 검사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금융관련법령 중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 등 규제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
6.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지정을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자는 대상 서비스의 변경, 서비스의 추가,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금융위원회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변경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혁신금융사업자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
2.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의 회사

②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금융 서비스별 또는 신청 회차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신청서 검토 결과 미비사항이 발견되거나 소명이 부족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는 관련 행정기관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혁신금융사업자가 제18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4. 혁신금융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혁신금융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받지 않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또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7. 혁신금융서비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13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③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또는 기술·금융 관련 연구소에서 7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기술·금융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서 7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법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비자보호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심사한다.

1.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여부
2. 해당 금융서비스가 기존의 금융서비스와 비교할 때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

3. 해당 금융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
 4. 이 법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 없이도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특례를 적용할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규제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5. 신청자가 해당 금융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6.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업무방법이 구체적이며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한지 여부
 7. 다음 각 목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등이 충분한지 여부
 - 가. 이용자의 범위 또는 이용자 수, 건별 거래 금액의 한도, 고객별 거래 횟수 등에 대한 제한 방안
 - 나.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 고지 및 동의 수령 방안
 - 다. 제28조에 따른 분쟁 처리 및 조정 방안
 - 라. 지정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 마.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 바. 지정기간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 사.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8. 해당 금융서비스로 인하여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
 9. 해당 금융서비스가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
- 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에 법령의 제·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①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자의 인허가·등록·신고, 사업자의 지배구조·업무범위·건전성·영업행위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와 관련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 중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를 인정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재산, 개인정보 등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거나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상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20.1.)】

II.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 자연인인 명의인 또는 법인인 명의인의 대표자등이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원본, 명의인이 자연인이 아닌 경우에는 명의인을 대신하여 금융거래 계약 등을 요청하는 그 대표자등의 실명확인증표를 포함)를 사진촬영 또는 스캔 후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메일, 파일 업로드 등의 방식으로 제출

② **영상통화** :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 영상통화 등을 통해 금융거래 계약 등의 체결 등을 요구하는 사람의 영상과 그 사람이 제출한 실명확인증표상의 사진을 비교·대조

* 고객이 위협이나 강박상태에 있는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다른 비대면 방식을 통한 추가 확인이나 대면확인 요구 가능

③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 본인만 수취할 수 있는 우편 등을 통해 고객에게 현금카드, 통장, OTP,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되어있는 고객의 기존계좌로부터 금융회사가 소액이체를 받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고객이 동 계좌에 대해 사용권한이 있는지 확인

* 예 : ❶고객이 금융회사가 지정한 금액을 이체, ❷금융회사가 기존 계좌에 소액 이체 후 고객이 해당 자금을 금융회사에 재이체, ❸고객의 기존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가 소액이체 등의 방식을 통해 1회용 인증번호 등을 전송하고 고객이 해당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 등

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 금융회사에 생체정보**(이하 “바이오정보”라 한다)를 등록한 고객은 사전에 대면·비대면 등으로 등록한 바이오정보와 비교를 통해 확인

* 바이오정보 외에 새로운 방식의 실명확인 방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은 불필요하고,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적용 가능

** 지문, 정맥, 얼굴(안면), 홍채, 음성, 서명, 키스트로크, 보행 등 개인의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을 디지털화한 정보

- ⑥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 공인인증서, 아이핀(I-PIN), 휴대폰과 같이 인증기관 등에서 신분확인 후 발급한 파일, 아이디·비밀번호, 전화번호 활용
- ⑦ 다수의 고객정보 검증 :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예 :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직장정보 등)와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

Ⅲ.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

□ 비대면 실명확인시 개별 비대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Ⅱ.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의 ① ~ ⑤ 방식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 (의무사항)

* 예시 :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 ④기존계좌 활용

○ 이와 함께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추가 확인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가급적 다중의 검증과정을 거친 후 계좌개설 (권고사항)

* - ①~⑤ 방식의 기본확인방법을 보완·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⑥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⑦다수의 고객정보 검증" 방식 등을 추가 적용

- ⑥, ⑦ 방식 외에 본인확인 방식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가능

** 예시 : ① + ④ + ⑥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확인

① + ② + ⑦고객이 제공하는 정보와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

⇒ 금융회사가 위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였다면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실명확인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은행과	자금세탁방지실
연 락 처	02-2100-2950	02-3145-7500